

보도시점 (지 면) 7. 1.(월) 조간  
(인터넷) 6. 30.(일) 12:00

## 중소기업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 기술침해 사전예방·사후구제 전문가 자문을 최대 7일까지 무료 지원
-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에 따르면 중소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과 ‘기술보호 지원반’을 하나로 통합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에게 기술침해 사전예방 또는 사후구제를 위한 법률 및 보안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기술보호책임관 13명과 기술보호 전문가\* 217명으로 구성된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국 각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에 신속하게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침해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기업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점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요령 교육, 지식재산(IP) 관리, 노무 관리 등을 지원한다.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분쟁 및 소송 대응 방안, 법률자문 등 사후구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사업은 분야별 최대 2일 또는 3일까지 무료로 지원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중소기업들이 전문가 현장 자문을 분야에 관계없이 한번에 최대 7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기술혁신정책관실 기술보호과	책임자	과 장	정강은 (044-204-7780)
		담당자	주무관	김윤정 (044-204-76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책임자	과 장	신훈목 (032-450-1151)
		담당자	주무관	강진구 (032-450-1155)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지역별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전예방·사후구제를 위한 전문가 자문 최대 7일 무료 지원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기술보호책임관 13명 + 전문가 217명(보안 134명, 법률 83명(변호사 35명, 변리사 32명, 노무사 16명))

- (지원범위)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자문

구분	지원 내용
사전예방	기업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점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요령 교육, 지식재산(IP) 관리, 노무 관리, 근로계약서 유효성 검증 등
사후구제	기술 분쟁 및 소송 대응 방안, 법률 자문 등

- (지원대상) 기술보호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가 필요한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제2호의 중소기업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2의 중견기업

□ **개편 전후 비교**

